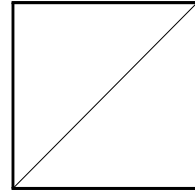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5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 26. (제 2 차)

의
결
사
항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1. 26.

1. 의결주문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와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대주주와의 전산용역 계약에서 확인된 '계약검수 및 지체상금 처리' 관련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해 「보험업법」 제196조에 따라 과징금 155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업법」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舊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舊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다. 관계부서 협의

- 2020년 제29차,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1.26., 12.3.) 심의필

- 2021년 제5차, 제6차, 제10차, 제17차, 제18차, 2022년 제1차, 제2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1.3.12., 3.26., 5.21., 9.17., 10.8., 2022.1.6., 1.20.)
및 2021년 제1차, 제2차, 제7차 임시 안전검토 소위원회(2021.4.14.,
4.28., 9.29.) 심의필

라. 제재내용 공개 : 2021년 제14차 금융위원회(2021.7.21.) 의결 당시
비공개하였던 제재내용(제269호 안전)을 포함하여 공개

마. 특이사항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일부 조치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안은 2021년 제14차 금융위원회(2021.7.21.)에서 원안의결하였으며,
본안은 잔여 조치요구사항 등에 대한 안전임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조치명령

- 삼성생명보험(주)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명령한다.

- 다 음 -

- 가. 용역계약 검수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검수인력·기준, 검수기한 연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나. 지체상금 청구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간 공식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되, 실무자 위임시 위임범위 및 업무수행자 등에 관한 사항
- 다.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체화된 지체상금 합의·청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의 업무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삼성생명보험(주)은 이사회에 보고한 업무처리절차·기준에 따라 OO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 삼성생명보험(주)은 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이행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 다 음 -

- 가.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 지체상금 청구 등의 업무처리절차·기준
- 나. OO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관련 처리내역(이사회 보고 내용 포함)
- 다. 지체상금 처리 관련 기타 이행내역

<별지2>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삼성생명보험(주)

○ 과징금 155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등)

(1)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입원보험금 부당 부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20.~2019.6.28. 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이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이하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한 총 ○○○건(청구금액 ▲,▲▲▲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암입원보험금을 부지급¹⁾한 사실이 있음

1) 총 ○○○건에 대해 보험금 부지급 통보 후 수익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해하여 ▲,▲▲▲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보험약관에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보험약관을 해석”하고,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약정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¹⁾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함)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요양병원도 약관상 보장하는 병원의 범위에 포함

-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인 암진단서, 암입원증명서 등의 보험사고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¹⁾ 등 없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 처리한 사실이 있음

- 1) 금감원 등은 해당 건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요건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실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건별 의료자문을 진행 하였으며 의료자문결과 등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음

(2) 재해사망보험금 등 부당 삭감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26.~2019.9.5.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부지급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백만원)보다 ▲,▲▲▲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재해로 인한 장애,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요추 압박골절, 외상성 추간판탈출 등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경도의 퇴행성 질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백만원)보다 ▲,▲▲▲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 입원급여금, 골절진단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정액보험과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해와 질병이 공동 요인이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백만원)보다 ▲▲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 뇌혈관·생식계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객관적인 서류(진단서·입원기록지 등)를 통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입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 및 근거 없이 부당하게 삭감 지급하는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백만원)보다 ▲▲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음

< 붙임 >

관계 법규

I. 보험업 관련 법규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③ (생략)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11. (생략)

②~④ (생략)

「(구)보험업법」(2017.4.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10~11. (생략)

②~④ (생략)

II. 제재 관련 법규 등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생략)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6) (생략)

다. (생략)

라.~마. 삭제

8. 삭제

9. (생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 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다. (생략)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바. (생략)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생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2)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 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법정부과한도액 - 200억원) × 7/80
2천억원 초과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1,800억원 × 7/80 + (법정부과한도액 - 2,000억원) × 7/160

6. 기본과징금의 조정 (1차 조정)

가. 원칙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단계 조정)

구분	고의	과실
중대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12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보통의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경미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통의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 - 중대,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2단계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 범위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1.~3. 삭제

③ ~ ④ (생략)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생 략)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생 략)

③ 제1항에 정한 보호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해위예의 관여 정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생명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45	02-3145-7795